

다산포럼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인권과 민주주의, 변혁적 정의의 마음들

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보호 장치로 기능해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출범시킨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관이었다. 민주화 이후, 이 기관들은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 악법을 철폐하고, 폭력에 물든 습성에서 회복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회에 뿌리내리며 변혁적 정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12월 3일 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며 진실화해위원회의 핵심가치를 훼손하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의 적법절차를 방해하며, 피의자 윤석열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려는 시도를 했다.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은 '평화로운 계엄'이라는 궤변과 이를 통해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려는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현행 법상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최고형인 사형선고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판단을 해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절차를 수호하면서도, 이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 민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과제는 파시즘의 발

호 속에서 독일 사회가 고민했던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민주적 조직과 제도를 장악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하는 것을 제도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에서 어떻게 방어하고 예방할 것인가가 민주주의의 긴급한 과제이다.

정치학자 칼 퇴벤스타인은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일부 수정하는 법적 대응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기본법상의 위헌 정당 해산 제도와 홀로코스트 부정 등 심각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사처벌법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발호 속에서 내전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대화와 포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들도 있다. 단호함과 신속성, 민첩성에 기반한 결단과 전투적 민주주의의 전략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괴물과 싸우면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왜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그리고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 석상에서 강조했던 생명에 대한 외경과 화해의 마음을 품고 되새기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를 튼튼히 할 때만이 새로운 세상, 변혁적 정의로 나아가갈 실낱 같은 가능성이 열릴 것 같다.

NGO 칼럼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인간 생명의 가치 우선 시대 언제 가능할까

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는 물론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마지막 희망인 법원마저도 책임규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 생명을 뒤로하며 정부는 예산 타령을 하고, 민간사업자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 시대가 과연 옳은 방향일까.

정치인들은 현장에서 가서 애도하고 위로하면 끝이 아닐 것이다. 공공조직에서 진실 규명이 어렵다면, 입법당사자들이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파악하고, 정부에 끝까지 끈질기게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요구하고, 빈틈 있는 법률은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도 어려운지 묻고 싶다.

생명을 잃고 고인이 되신 분들과 가족은 물론 재해 손실로 인한 피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는 사회적 구조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공기업, 해당 기업, 개인 등 여러 주체가 얽혀 명확한 책임소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책임소재의 복잡성 때문에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명확한 책임자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희생자와 유가족은 억울해하며 복받쳐 오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한없이 불안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사회적 참사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의미가 없다. 관련된 법률이 불안전하거나 구제되지 않아 책임소재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사법부가 근본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무안공한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는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기구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사고의 기술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분석해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부와 공공기관, 정치권, 기업 모두가 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관련자의 책임 등을 밝혀내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더 이상 희생자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기고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커뮤니티 대표

망국의 이분법, 버리기 딱 좋은 나날

이분법적 구조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성(性)과 정(情)이다. 성리학에서는 인간 본성(性)은 선(善)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하늘의 이치를 따른다고 여겨졌다. 반면 감정(情)은 기의 작용으로, 때로는 본성을 흐릴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이로 인해 본성과 감정을 대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도(道)와 기(器)는 또 어떤가? 도(道)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이상이며, 기(器)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물로 구분된다. 이는 이상과 현실, 철학과 실용의 대립적 구도를 형성한다. 잘 알려진 선(善)과 악(惡)의 경우를 보자. 성리학은 도덕적 이분법을 강하게 제시하며, 인간의 행위를 선(善)과 악(惡)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구분은 조선 시대 윤리 체계와 교육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의 갈라치기다. 성리학은 유교적 가부장제를 뒷받침하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했다. 남성은 이(理)를, 여성은 기(氣)를 상징적으로 연관 짓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남성의 우위와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듯 성리학의 논리는 우리 문화 곳곳에 이분법 정서로 스며들어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끼여든다.

이런 가운데 희망을 주는 또 하나의 기사를 본다. "우리는 보수의 뒷발이 아니다. (중략) 보수에 미래는 없다. 내 아버지의 표는 내 표로 상쇄될 것이다. 내 어머니

니의 지지는 내목소리에 묻힐 것이다. 부모와 상사의 표를 무효로 만드는 길에 내 자매와 동료와 친구들이 함께할 것이다.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부서질 것이다" 라는 일명 "TK딸 첩리자"를 수행하는 여성청년 참가자의 피 땀은 '선인'.

순간 필자의 가슴은 뛰었다. 기성세대들에 의해 강제된 아웃사이드들의 억울을 보았기 때문이다. 보통시 민의 분노라 밝힌 글에서는, 보수를 자처하는 기성세대들의 보신주의 체제에 비열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그에 따른 분노계지를 붉은 펜으로 강조해 외친다. 아울러 그네들의 이분법적 사고와 허약한 상상력에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은 없다고 단언한다. 이처럼 타락한 기성문화의 유희기만 만료될 선언하고 이제부터는 시스터 후드, 즉 자매애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정치적 이념은 연속적이며 특정 주제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TK=보수, 호남=진보"라는 이분법으로 갈라치기 된 기성질서. 이런 구태를 극복하려는 여성청년들의 각성에 박수를 보낸다. 이분법을 넘어선 곳에 '남태령대첩'의 '약자동맹'이라는 스펙트럼 사고가 있다. 다양성을 담보한 가치를 강화해 공감연대로 나아가려는 그들이 있기에 광장에서 울려 퍼지던 '다시 만난 세상'은 희망적이다.

社說

여야 지지율 변동... 아전인수 말고 민심 읽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 정국이 얽히고설키면서 여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최근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내인 것으로 나왔지만, 이에 대해 여야는 민심을 읽기는커녕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무려 10%포인트나 올랐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36%로 12%포인트 떨어져 양당 격차는 2%에 불과했다.

이어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0%p 하락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정국 아래에서 민심의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

다. 탄핵에 찬성하지만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민주당은 지지자 감소의 원인을 철저히 따져서 당의 행보에 반영, 탄핵과 수사의 추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을 마치 국민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듯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거나 탄핵심판과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극단적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을 향한 극우 테러의 상징인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까지 주선하는 행위는 보수층마저 고개를 돌리게 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여당, 마치 이미 여당이 된 양 행동하는 야당. 국민의 눈은 정확하다. 여야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번 탄핵정국 이후 국민은 반드시 정치권을 심판할 것이다.

GGM파업, 노동계도 지역 악영향 우려 "철회를"

지역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결국 그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GGM 노조의 파업은 해당 노동사업장의 파업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광주지역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타 대도시에 비해 기업과 산업 현장의 규모가 턱 없이 적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로서는 청년백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GGM은 일자리가 적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노동계·시민사회·민간기업·지자체 등이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기업이 다. 기업 자체가 이윤 창출을 우선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 이를 위해 GGM이 안정된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35만대 생산까지는 노사상생협의회에서 노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즉 기업이 일정 수준

에 진입할 때까지 파업을 자제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 이에 따라 GGM 구성원들은 입사시 사실상 무노조·무파업을 골자로 한 노사상생협정서 준수에 서약한 것이다.

노조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다만 지역사회는 이번 파업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든가, 목표 아래 출범한 GGM의 취지를 손상시켜 유사한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의 무산,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현대자동차 위탁 중단 등의 사태로 번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지부 등 노동계도 이례적으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행히 이번 파업은 조합원의 9% 수준이라고 한다. 광주시와 지역사회는 GGM 노조와의 대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길 바란다.

無等鼓

플리처상 수상자인 스티븐 그린블랫은 '폭군'이라는 책을 통해 셰익스피어 작품 속 독재자의 뒤돌린 욕망의 뿌리를 살핀다. 셰익스피어 연구자이기도 한 그는 책에서 '독재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리처드 3세' 작품 등장인물을 6가지 그룹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리처드 3세는 영국 왕 가운데 가장 사악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인물이다. 재위 기간은 2년에 불과했지만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탓에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

라고 보는 사람들. 다섯 번째 그룹은 다소 음흉한 그룹으로, 독재자의 집권으로 그들 자신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꼽혔다. 여섯 번째 그룹은 독재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명령을 따르거나 적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챙길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부류다. 국내 현실은 어떤가.

독재 조력자

이른바 '독재 조력자' 중 첫 번째 그룹은 독재자에게 진짜로 속은 이들로, 그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그의 약속을 믿었고 그의 감정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두 번째는 괴롭힘과 폭력의 위협 앞에서 겁을 먹었거나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꼽았다. 세 번째 그룹에는 독재자가 사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됐다.

비상계엄을 획책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12·3 사태 이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

와 행동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침묵했던 국

무위원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추

천을 미룬 전 총리, 국회 추천을 거친 3명

의 헌법재판관 중 자의적으로 2명만 임명

하는가 하면 내란특검을 거부하고 체포영

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를 방치한 대통령

관련대행,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을 막았으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불법

행위·원천무효'를 외친 4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독재 협력자들이 셰익스피

어 작품 속에만 존재할까.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